

도,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조성한다

규제 없는 첨단산업 시험장으로... 국가혁신성장 선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세계적 수준의 실험무대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로 조성한다.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규제가 없는 첨단산업 시험장, 자유로운 기술 실증 공간으로 만들어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을 국가 규제혁신의 선도모델로 육성해 대한민국 산업구조 재편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을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로 조성해 기업들이 가장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6대 전략산업에 집중 육성하는 ‘ABCDEF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재생에너지, 미래제조업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인프라와 인재, 자본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 활동 제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여기에 ‘G’, 즉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를 더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새만금 전역을 규제 없는 실험 구역으로 지정해 첨단산업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만금이 이 같은 전략의 최적으로 꼽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일 매립지 규모만 291㎢에 달해 국내에서 가장 넓은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공항과 신항만, 내부간선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속속 확충되고 있다.

특히 RE100 기반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 중이라는 점은 글로벌 기업 유치에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 세계적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 여부를 투자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새만금이어말로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확보한 준비된 산업 전진기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새만금에는 이미 다양한 미래 산업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초대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21일 도청에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조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형 AI 데이터센터와 비롯해 K-방산 테스트베드, 의료용 헬프 산업, 하이퍼 튜브 시험센터, 스마트팜과 K-푸드 수출 허브 등 차세대 산업이 유치되거나 추진 단계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광활한 부지와 재생에너지, 국제 물류망이 결합된 복합 실험무대로서 새만금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도는 메가샌드박스가 본격 가동되면

의료용 헬프 산업은 법적 특례가 적용될 경우 의학·바이오 분야의 세계적 연구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팜과 K-푸드 수출 허브는 농생명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동북아 식량 공급망에서 새만금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라며 “새만금은 이미 준비된 전략 지대로서, 정부 정책을 빠른 속도로 실현하고 성과로 입증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하반기 안에 산업별 규제특례 목록을 정리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법령 개정 및 국회 건의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을 참여시켜 시범사업을 발굴, 제도 시행 직후 가시적 성과를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도는 새만금이 성공적으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로 자리 잡으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연구개발 클러스터 형성도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 안호영 의원 “ATU 본사 이전, 태권도 수도 도약 전환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아시아태권도연맹(ATU) 김상진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장기 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아시아 태권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본부 이전을 위해 힘써 주신 김상진 회장님과 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주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태권도원을 품은 무주가 ‘태권시티’로 도약하는 길에 동참하고자 본부 이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체류형 태권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태권도인들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뒤 무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불편이 크다”는 현실적 애로사항도 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외 태권도인들의 무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무주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이전하는 것은 무주가 세계 태권도의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1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제공)

“전북 현안 진단, 실질적 진전 방안 마련”

민주 호남발전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대표 정청래 국회의원)은 호남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상설기구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에 따르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삼석 최고위원(영암·무안·신안), 수석부위원장에 이원택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병훈 전 국회의

원(광주), 김성 장흥군수(전남)으로 구성됐다.

전북 위원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역 국회의원실, 도내 10개 지역 위원회와 14개 시·군등의 추천을 받아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꾸려졌다고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호남의 숨고한 회생과 혁신에 이제는 실천으로 보답할 때”라며 “올해 안에 특위가 마련한 성과물을 당에 보고하면 그 내용으로 정부와 협상하겠다. 공공의 대 설립과 교통망 확충 등 호남 숙원사업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전북의 현안을 진단하고, 공공의대와 광역 교통망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절차와 과제를 차분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특위를 중앙당·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논의의 송고한 회생과 혁신에 이제는 실천으로 보답할 때”라며 “올해 안에 특위가 마련한 성과물을 당에 보고하면 그 내용으로 정부와 협상하겠다. 공공의 대 설립과 교통망 확충 등 호남 숙원사업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형 송전망 정책, 독일 에너지전환 사례서 찾다

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특위
환경운동연합 등과 정책 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영영선)는 21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송전탑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독일 에너지전환과 송전망 정책이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대규모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 환경훼손, 안전 문제 등 주민 갈등 요소를 점검하고,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송전망 지중화, 분산형 전력망 구축 사례를 통해 전북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좌장은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영광회 독일 아교라



에너지기반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에너지전환과 송전망 정책의 교훈과 시사점’을,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망 분리와 배전 독립’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서 진안군송전탑반대대책위 집행위원,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지정 토론을 진행했으며, 시·군 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의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이숙자 남원시의원
민원 대응 노력 ‘호응’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대응에 적극 노력하며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이 의원은 월라동 산책길에 대형차량의 주차로 인한 위험과 불편함에 대한 민원에 남원시가 함께 민원 해결에 나서 불법주차단속, 반사경 설치, 가드레일 설치 요청 민원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

특히 안전재난과장이 민원 응대에 함께 참여해 민원 발생 현황과 대응 방안을 건설과, 교통과와 함께 즉시 논의하며 현장에 함께 나가 해결책을 도출하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였다.

이숙자 의원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방송3법’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MBC 지배구조 개편 주내용
방문진 이사 13명으로 확대
공영방송 독립·투명성 강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법 개정은 한국 언론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방송학회·기자협회·PD협회 등 방송 관련 직능단체가 직접 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추천권을 나눠 갖던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MBC 사장 선임 절차도 대폭 강화됐다.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100명 이상의 사정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제안하고, 방문진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최종 선출된다.

이는 공영방송 사장 인선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171명 중 169명이 찬성하고 반대 1명, 가권 1명으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저항했으나,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앞서 국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어 EBS 법 개정까지 마무리되면 방송 3법 개정이 완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EBS 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좌절했던 민주당 주도의 개혁 법안들이 다시 추진력을 얻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향후 EBS 법 개정까지 마무리되면 한국 언론의 자율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만호 기자

“농진청 일부 부서 수도권 이전, 정부 정책 역행”

임승식 도의원,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 요구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임승식 의원(정읍)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옮긴다는 입장을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25일 조직 개편(3부 14과 2센터 2연구소 4출장소)을 단행하면서, 식품자원개발부의 핵심 부서인 식생활영양과(15명)와 푸드테크소재과(16명)를 전북혁신도시가 아닌 수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한 식품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를 수도권으로 옮긴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올해 11월부터 푸드테크소재과를 우선 이전하고 이어 식생활영양과도 단계적으로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2015년 경기도 수원



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불과 10년 만에 다시 연구 인력을 빼돌리겠다는 것은, 농촌진흥청이 전북자치도에서 쌓아온 농업·농촌 연구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임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이미 식품·바이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핵심 연구 기능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려는 것은 전북자치도의 식품·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연구 역량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승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된 농촌진흥청의 일부 부서 수원 이전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인력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익산시의회,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김진규)’는 21일 익산시의회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스마트농업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착수보고회 이후 농업 전문가 세미나, 농업인 설문조사 진행상황, 스마트농업 국내·외 선진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익산시 농업·농촌의 여건 분석과 스마트농업 추진 전략(안) 등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시의회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단체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10월 최종보고회를 열고 ‘익산시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